

가족의 경제위기 대응 현황과 정책과제¹⁾



Family Economic Crisi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조성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고에서는 가족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생활의 특성과 정책과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가족 경제위기 발생에서 고연령층과 소득이 불안정한 임시·일용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위기에 훨씬 취약하였으며, 가족 경제위기 발생 원인으로 ‘가계 부채’, ‘자녀 양육·부양’을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저학력층과 저소득층은 가족위기 경험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위기 경험에 대응하는 가족 자원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경제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있었으며, 가족 경제위기 해결 방식에서는 가족이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경제위기는 실업 및 부도를 야기하여 가계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이러한 수입 감소는 가족생활의 기틀을 흔들며 가족 관계

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해체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²⁾ 우리나라에는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경제적 위기가 있었는데, 경제위기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2008년의 금

1) 본고는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장 제2절 ‘만성적 위기와 건강성’ 중 ‘가족경제위기와 건강성’의 내용을 발췌 및 보완한 것임.

2) 정진성. (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인구학**, 24(1), 91-121.

용위기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이러한 경제 위기는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08년의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택을 구매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세로 몰려 전세 가격이 급등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자율이 하락하여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형태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⁴⁾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지속되면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하려는 이들은 전세 가격 폭등에 직면하여 대출로 전세금을 충당하거나 그것이 녹록지 않은 이들은 월세로 남게 된다. 이는 주거 안정성이 점점 악화돼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만일 대출로 전세금을 충당했다면 가구 부채의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투자자산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구성 중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⁵⁾ 부동산 중에서 주택의 경우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 변동에 따라 주택 가격 등락 폭이 크다.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는 가계의 유동성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매매하게 될 경우 주택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를 시도하거나, 구입하려는 이가 나타나지 않아 유동

성 위기에 빠지는 일도 생긴다. 또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경우 대출금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순부채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계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가계의 큰 지출 중 하나는 교육비를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비 지출의 특징은 소득탄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감소하였을 때 다른 지출을 억제하거나 저축한 돈으로 가능한 한 교육비 지출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과도한 부채를 지는 경우도 있다.⁶⁾ 부모 및 실직 등의 요인은 가계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전세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교육비 지출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하는 것은 가계 부채 증가로 연결된다. 또한,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교육시키고자 많은 투자를 했던 부모들은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일을 찾지 못함에 따라 생활비와 취업 준비 비용을 계속적으로 투자하느라 자신들의 노후 준비는 소홀히 하게 되어 머지않은 장래에 가계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가구가 파산하거나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등의 가족 경제위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3) 김경혜. (2009). 경제위기 시대의 사회안전망: 정책대상과 정책방향. 서울도시연구, 10(3), 23-36.

4) 노영훈. (2011).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택시장: 조세·재정정책적 함의. 한국조세연구원.

5)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자산 중 부동산의 비율이 69.2%로 나타나고 있음(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2016).

6) 손상희, 정영숙. (2003).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문제와 디지털 시대의 해결방안 모색. **가정관리학회지**, 21(1), 49-60.

그림 1. 가족사회 변화 현상과 가족 경제위기 현상



본고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가족사회 변화를 부도 및 실적, 부동산 가격 변동, 교육비 증가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족사회 변화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를 통해 가구가 파산하게 되거나, 또는 가구 부채가 크게 증가하거나 하우스푸어가 되게 하는 등 가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가족의 경제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가족경제위기가 상기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각 가구의 가족경제 위기 발생 기제 및 해결 방안, 그리고 정책적 욕구에 대해 전화조사

데이터⁷⁾를 이용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려 한다.

2. 가족사회 변화와 가족 경제위기

가. 가족 경제위기 발생 수준

가족 위기를 경험한 응답자 중에서 지금까지 가족 경제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비율은 전체의 61.6%로 조사 대상자의 약 3분의 2 분포를 보였다.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경험 비율을 보면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 경제위기를 경험한 비율이 낮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⁸⁾ 특히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 경제위기 발생률이

7) 일반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가족위기에 대한 인식태도 및 실태조사'의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음. 조사 대상은 전국 만 20~64세 이하의 성인 남녀이고, 조사 시기는 2016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이며, 전문 조사기관에 의하여 실시되었음. 2016년 주민등록 인구를 토대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법에 의하여 전국에서 만 20~64세 이하 남녀 1500명을 표본 추출하였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주 1)의 김유경 등(2016) 참조.

8) 본고에서의 소득은 현재 소득이고 가족 위기는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기간의 미스매치 가능성이 있음. 본고의 목적이 소득과 가족 경제위기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할 수는 없으나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즉, 인과관계가 반드시 '소득→가족 경제위기'라고만 할 수 없고, '소득←가족 경제위기'의 경우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본고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소득→가족 경제위기'로 설명하였음.

낮다는 결과는 다른 연구⁹⁾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결혼 상태별로 보면 유의하지는 않으나 이혼·별거·사별이 7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미혼으로 66.9%, 마지막으로 유배우(동거)는 59.0%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 경제위기 경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 이상의 차이가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 여부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비근로자에 비해 경제위기 경험 비율이 다소 높다.

이에 비해 위기를 경험한 응답자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위기로 가족 경제위기를 꼽은 비율은 51.5%로 과반수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가족 위기를 경험한 적 있는 경우와 유사하게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가장 힘들었던 위기가 가족 경제위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낮고, 응답자가 20~30대일 경우 가족 경제위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응답하였다. 결혼 상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 경제위기가 가장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 발생 수준

(단위: %, 명)

구분	지금까지 가족 경제위기를 경험한 적 있음		경험한 위기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이 가족 경제위기임		분석 대상 수
	비율	χ^2	비율	χ^2	
전체	61.6		51.5		691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69.0	10.936**	60.7	19.297	260
300만~500만 원 미만	55.7	(0.004)	45.8	(0.082)	203
500만 원 이상	56.3		44.9		155
연령					
20~39세	63.1	0.419	53.0	30.628**	217
40~59세	61.1	(0.811)	50.8	(0.002)	395
60~64세	59.8		51.2		79
결혼 상태					
유배우(동거)	59.0	5.051	50.5	0.863	491
이혼·별거·사별	70.7	(0.080)	51.8	(0.650)	58
미혼	66.9		54.9		142
근로 여부					
근로자	65.0	8.131**	55.1	8.040**	495
비근로자	53.4	(0.004)	42.9	(0.005)	195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59.

9) 송혜림, 성미애, 박정윤, 진미정. (2009). 경제적 위기 상황과 가족정책의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2009년 5월호(통권 제151호), 53-65.

나. 가족 경제위기 발생 원인 및 경험 기간

가족 경제위기의 발생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64.8%로 가장 많은데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실직, 직장 및 취업 문제'로 36.5%, 이어서 '가계 부채'(35.2%), '가계 파산·부도'(27.4%), '자녀 양육·부모 부양'(23.4%) 순으로 발생 원인 비율이 높다.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 가족 경제위기의 발생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 소득별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층에서 '경제적 어려움', '가계 부채'가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 응답자 연령별로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연령일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족 경제위기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혼 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의 경우 '가계 파산·부도'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게 되면 이혼 또는 별거하는 경향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근로 여부는 명확한 관계성이 보이지 않았다.

표 2.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의 발생 원인(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가계 파산·부도	실직, 직장 및 취업 문제	가계 부채	경제적 어려움	자녀 양육·부모 부양	성격 및 사고 방식	생활 방식	부부/부모-자녀 관계	중독/우울 증 등 정신적 문제	갑작스런 질병	자살/재난	기타	분석 대상 수
전체	27.4	36.5	35.2	64.8	23.4	4.0	4.9	5.2	6.5	13.2	1.2	2.2	35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7.1	35.3	35.6	66.8	22.4	4.8	5.4	6.7	8.5	16.4	2.3	1.8	158
300만~500만 원 미만	25.5	39.8	33.4	64.2	26.9	6.2	5.1	8.6	8.1	11.4	0.0	1.2	93
500만 원 이상	29.8	37.5	40.1	64.9	25.2	1.3	5.7	0.0	1.2	10.0	1.1	1.2	70
연령													
20~39세	30.0	33.8	36.4	55.7	8.9	0.8	2.0	3.6	2.1	9.9	0.0	2.6	115
40~59세	25.9	39.1	34.2	66.8	27.2	5.3	6.2	6.7	7.9	14.0	2.2	2.5	201
60~64세	27.6	30.8	36.9	81.0	45.9	6.7	6.3	2.5	12.7	18.9	0.0	0.0	40
결혼 상태													
유배우(동거)	26.0	38.5	36.1	69.1	27.4	3.0	5.9	3.7	7.3	12.7	1.5	1.9	248
이혼·별거·사별	39.4	29.3	28.0	64.5	28.5	22.2	8.9	17.9	11.4	22.1	2.7	4.0	30
미혼	27.5	32.8	35.3	51.2	8.4	0.0	0.0	5.1	2.1	11.4	0.0	2.4	78
근로 여부													
근로자	27.7	36.0	37.6	64.7	22.8	3.6	5.2	5.2	6.7	12.7	1.6	2.9	272
비근로자	26.7	38.0	27.5	65.2	25.2	5.3	3.9	5.1	6.0	14.8	0.0	0.0	84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1.

가족 경제위기를 경험한 기간별 분포를 보면 10년 이상이 27.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5~10년 미만(25.5%), 3~5년 미만(20.5%), 1~3년 미만(19.6%), 1년 미만(6.4%) 순이다. 평균 기간은 6.6년으로 분포를 반영한다.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 가족 경제위기 경험 기간을 보면 가구 소득은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며,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경제위기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 및 결혼 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근로 여부별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위기 기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길고, 결혼 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의 경우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의 경험 기간

(단위: %, 명)

구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계(수)	χ^2	평균(년)	F(t)
전체	6.4	19.6	20.5	25.5	27.9	100.0(348)		6.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4	11.1	16.5	26.4	37.7	100.0(152)	23.459**	8.2	7.067**
300만~500만원 미만	6.2	24.9	24.9	23.7	20.2	100.0(92)	(0.003)	5.9	(0.001)
500만 원 이상	1.4	25.2	24.0	29.7	19.7	100.0(70)		5.1	
연령									
20~39세	8.4	23.0	24.8	27.1	16.7	100.0(115)	19.096*	4.7	21.598***
40~59세	6.5	19.1	18.8	24.8	30.7	100.0(195)	(0.014)	6.7	(0.000)
60~64세	0.0	11.6	16.5	24.5	47.4	100.0(38)		12.1	
결혼 상태									
유배우(동거)	6.8	20.3	19.3	26.7	26.9	100.0(243)	13.775	6.8	6.715**
이혼·별거·사별	2.8	2.8	15.9	27.6	51.0	100.0(29)	(0.088)	9.8	(0.001)
미혼	6.6	23.5	26.2	21.3	22.4	100.0(77)		4.9	
근로 여부									
근로자	6.9	18.8	21.1	27.2	26.0	100.0(265)	3.200	6.6	-0.113
비근로자	4.8	22.0	18.9	20.4	33.9	100.0(84)	(0.525)	6.7	(0.910)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4.

다. 가족 경제위기상의 어려움과 위기 전후 변화

가족 경제위기상의 어려움은 ‘우리 가족 안에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가족 안에 의존할 사람이 없었다’는 응답으로 29.3%다.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 발생 당시 가장 어렵게

느꼈던 점을 보면 가구 소득은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지만 소득이 높다고 해도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비율이 높으며, 특히 어디에 의존해야 하는지 모르는 비율이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높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우리 가족 안에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부족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혼 상태별로 보면 미

표 4.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 발생 당시 가장 어렵게 느꼈던 점

(단위: %, 명)

구분	가족 안에 의존할 사람이 없음	가족 안에 물적 자원이 부족함	어디에 의존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알 수 없음	친척·친지/이웃·지인 중에 우리 가족을 도와줄 사람이 없음	복지기관/국가의 도움이 없었거나 적절한 시점에 도움을 받지 못함	기타	계(수)	χ^2
전체	29.3	41.7	10.0	6.7	11.3	1.1	100.0(349)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31.9	38.3	9.7	9.2	9.8	1.0	100.0(157)	11.712
300만~500만 원 미만	23.5	48.2	7.6	3.6	14.7	2.5	100.0(91)	(0.305)
500만 원 이상	28.7	36.3	16.4	6.3	12.3	0.0	100.0(68)	
연령								
20~39세	28.9	49.1	7.1	2.7	10.9	1.3	100.0(113)	11.706
40~59세	27.9	39.6	11.7	7.6	11.9	1.2	100.0(198)	(0.305)
60~64세	37.4	30.8	9.6	13.2	9.1	0.0	100.0(38)	
결혼 상태								
유배우(동거)	28.1	40.7	11.4	6.8	11.9	1.0	100.0(243)	22.200*
이혼·별거·사별	46.2	26.6	2.7	18.6	5.9	0.0	100.0(30)	(0.014)
미혼	26.1	50.8	8.3	1.5	11.3	2.0	100.0(76)	
근로 여부								
근로자	25.4	44.0	9.3	7.3	13.1	0.9	100.0(268)	13.522*
비근로자	41.9	34.2	12.4	4.4	5.2	1.8	100.0(81)	(0.019)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6.

혼인 경우 '우리 가족 안에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부족했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높고, 이혼·별거·사별한 이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가족 안에 의존할 사람이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가장 높다. 근로 여부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가족 안에 의존할 사람이 없었다'는 응답은 일을 하지 않는 이들(41.9%)의 비율이 높았고, '우리 가족 안에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이 부족했다'는 응답은 일을 하고 있는 이들(44.0%)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 경제위기를 겪은 가구 및 가구 구성원들이 위기를 겪고 난 후에 위기를 겪기 전과 어떠한 점이 달라졌다고 느끼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의 결속과 화합이 강화되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는 결과가 있는 것과 같이¹⁰⁾ 경제적 위기 이후의 변화는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전화조사 결과 대부분이 '경제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지만(46.1%), 긍정적인 응답이 뒤를 이었다.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가 34.6%로 두 번째로 높고, '위기 경험 후 삶이 더 좋아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1.8%로 그다음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신체 및 정신건강 악화'도 21.1%로 낮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이 경제위기를 겪은 이후의 변화는 타 연구¹¹⁾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다차원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 가족 경제위기 전후의 변화를 보면 가구 소득별로는 5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다른 계층보다 경제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비율이 낮고, 가족 간의 정과 삶이 좋아졌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연령별로는 20~30대보다 40대 이상에서 경제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고, 60세 이상에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비율이 높다. 또한 60세 이상에서 가족 간의 사이와 삶이 더 좋아졌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 상태별로는 이혼·별거·사별한 이들이 가족 경제위기 전후로 대부분 이혼과 별거를 한다는 것을 조사 결과가 뒷받침해 주고 있으며(53.8%), 이들은 경제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배우의 경우 가족 간의 사이와 삶이 더 좋아졌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다.

10) 백진아(2001).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주의. **사회발전연구**, 7, 27-50; 정진성(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 인구학**, 24(1), 91-121.

11) 위의 책

표 5.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 전후의 변화(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경제 생활이 어려워짐	가족 관계 소원	이혼·별거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	사회생활 제약 (퇴사/휴직)	일상생활 제약 (대인 기피)	나쁜 생활 습관 증가 (알코올/흡연/중독 증상)	가족 간에 협동심/친밀감 증대	위기 경험 후 삶이 더 좋아짐	기타	분석 대상 수
전체	46.1	18.0	7.2	21.1	12.0	6.7	7.8	34.6	31.8	4.0	35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2.1	18.8	11.5	25.9	12.4	8.3	11.0	28.1	28.2	5.0	158
300만~500만 원 미만	42.6	18.1	6.1	13.9	8.5	2.8	6.4	36.0	33.5	6.9	93
500만 원 이상	41.8	15.4	1.4	18.9	12.4	8.7	5.2	46.2	40.4	0.0	70
연령											
20~39세	39.7	18.4	2.9	13.8	13.3	8.5	10.3	31.1	23.0	6.7	115
40~59세	49.9	18.7	10.3	23.3	10.1	5.7	6.6	34.0	33.9	3.2	201
60~64세	45.6	13.1	4.1	31.0	17.8	6.3	6.4	47.6	46.7	0.0	40
결혼 상태											
유배우(동거)	47.4	18.3	3.4	22.5	12.7	6.8	6.9	38.2	35.6	2.6	248
이혼·별거·사별	50.8	24.7	53.8	27.0	8.3	11.7	6.0	22.7	25.5	0.0	30
미혼	40.0	14.3	1.1	14.2	11.4	4.2	11.3	27.7	21.8	10.1	78
근로 여부											
근로자	45.2	17.7	7.6	19.8	11.9	6.3	9.9	34.9	33.2	4.2	272
비근로자	49.1	18.9	5.9	25.5	12.5	7.8	1.1	33.6	27.1	3.2	84

자료: 김유경, 이여송,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67.

라. 가족 경제위기상의 해결 방식 및 도움 요청

가족 경제위기상의 해결 방식을 보면 '가족이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는 응답이 82.2%로 가장 높고, '친인척 및 동료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가 21.9%로 그다음으로 나타나고,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와 '자조모임(동일한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다'는 응답을

합한 비율이 10% 정도를 차지한다.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 해결 방식을 살펴보면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이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큰 반면, 이혼·별거·사별한 경우는 그 비율이 낮으며, 친척의 도움 또한 받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 여부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표 6.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가족이 협력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함	친인척/동료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함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함	자조모임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노력함	기타	분석 대상 수
전체	82.2	21.9	7.5	2.7	6.7	35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7.6	20.4	7.5	3.5	8.4	158
300만~500만 원 미만	84.0	26.9	4.4	2.4	3.0	93
500만 원 이상	86.1	19.0	8.1	2.6	9.8	70
연령						
20~39세	84.8	25.0	11.4	2.0	2.4	115
40~59세	79.3	22.4	5.5	2.8	8.7	201
60~64세	89.3	10.9	6.3	4.4	8.7	40
결혼 상태						
유배우(동거)	83.6	21.6	6.4	3.3	5.2	248
이혼·별거·사별	67.3	18.9	5.7	0.0	26.6	30
미혼	83.0	24.1	11.7	1.6	3.6	78
근로 여부						
근로자	81.6	22.5	7.3	2.8	7.8	272
비근로자	84.0	20.1	7.8	2.4	3.0	84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70.

가족 경제위기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한 비율은 64.3%인데, 도움을 요청한 경우 대상자로는 부모가 31.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형제자매로 24.6%, 배우자 12.7%, 친구·동료 11.0% 순이다. 즉, 상위 3위까지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그 점유율은 68.6%이다. 그런데 이것을 지인(친구·동료 등)까지 범위를 확장시키면 84.8%로 증가한다.¹²⁾ 이것은 국가의

복지 정책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적인 영역이 책임져야 할 일을 가족에게 전가시켜 온 결과이기도 하다.¹³⁾

12) 자녀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작지만, 자녀까지 포함하면 85.5%임.

13) 백진아. (2001).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주의. *사회발전연구*, 7, 27-50; 정진성(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인구학*, 24(1), 91-121.

표 7.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 발생 당시 우선 도움 요청 대상

(단위: %, 명)

구분	우선 도움 요청 대상											계(수)	χ ²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동료	이웃	종교단체	공공기관	상담소·복지기관	기타			
전체	31.3	12.7	0.7	24.6	11.0	5.2	1.1	8.7	0.4	4.3	100.0(22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26.1	10.3	0.9	22.9	12.4	8.4	1.8	12.1	0.9	4.1	100.0(91)	15.694	
300만~500만 원 미만	34.9	16.9	0.0	24.9	13.2	3.4	1.5	2.7	0.0	2.5	100.0(67)	(0.614)	
500만 원 이상	37.0	10.2	1.6	22.5	7.0	3.6	0.0	9.8	0.0	8.3	100.0(51)		
연령													
20~39세	48.5	7.9	0.0	14.8	15.5	7.6	0.0	3.6	0.0	2.1	100.0(78)	53.557	
40~59세	25.6	14.6	0.0	27.7	8.9	4.7	2.1	11.5	0.6	4.3	100.0(125)	***	
60~64세	3.6	18.5	7.1	41.0	7.0	0.0	0.0	11.3	0.0	11.4	100.0(23)	(0.000)	
결혼 상태													
유배우(동거)	28.8	17.5	1.0	23.9	11.1	2.5	1.0	9.4	0.5	4.4	100.0(164)	31.492*	
이혼·별거·사별	30.3	0.0	0.0	40.9	6.1	5.0	6.3	6.3	0.0	5.2	100.0(16)	(0.025)	
미혼	40.6	0.0	0.0	21.3	12.4	15.0	0.0	7.2	0.0	3.6	100.0(46)		
근로 여부													
근로자	29.2	13.7	0.0	23.8	12.2	5.2	1.5	9.9	0.0	4.6	100.0(173)	13.978	
비근로자	38.1	9.5	3.1	27.0	7.3	5.3	0.0	5.0	1.5	3.3	100.0(53)	(0.123)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72.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 가족 경제위기 발생 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별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친구·동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향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반면 소득이 높은 경우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와 친구·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 형제

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혼 상태별로 보면 미혼일 경우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혼·별거·사별한 이들은 주로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가족 경제위기 해결 여부와 장애 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가족 경제위기를 경험한 경우의 위기 해결 여부를 살펴보면 가족 경제위기가 해결되었다는 응답이 68.0%로 나타나 3분의 2 정도는 위기를 해결하였으나 나머지 32%는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 해결 여부를 보면 가

구 소득이 낮을수록 가족 경제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40~50대의 해결 비율이 다른 계층에 비해 조금 낮고, 이혼·별거·사별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있다. 근로 여부는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연령, 결혼 상태, 근로 여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표 8.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 해결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족 위기 해결 여부		
	해결된 비율	분석 대상 수	χ^2
전체	68.0	(356)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58.5	(158)	13.207*
300만~500만 원 미만	72.5	(93)	(0.001)
500만 원 이상	81.4	(70)	
연령			
20~39세	71.2	(115)	1.151
40~59세	65.7	(201)	(0.562)
60~64세	70.1	(40)	
60~64세	70.1	(40)	
결혼 상태			
유배우(동거)	68.5	(248)	0.339
이혼·별거·사별	62.2	(30)	(0.844)
미혼	68.6	(78)	
근로 여부			
근로자	68.4	(272)	0.087
비근로자	66.8	(84)	(0.768)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7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족 내에 위기를 해결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가 78.9%, '해결에 도움이 되는 외부 지원이 없어서'가 45.1%, '정보 부족

으로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몰라서'가 29.1%이다. 그 외에 외부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정도가 적어서라는 응답도 각각 1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가구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

(단위: %, 명)

구분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가족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몰라서	외부 지원이 없어서	외부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외부 지원이 적절하지 않아서	외부 지원 정도가 너무 적어서	외부 지원 기간이 너무 짧아서	기타	분석 대상 수
전체	78.9	15.2	29.1	45.1	18.7	15.0	17.4	11.1	3.8	114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81.4	14.6	31.7	47.3	18.8	13.2	20.5	12.9	4.1	66
300만~500만 원 미만	80.4	24.3	26.9	51.5	7.5	24.0	18.1	7.6	3.4	26
500만 원 이상	78.6	6.1	22.1	29.3	28.5	18.8	12.8	9.0	0.0	13
연령										
20~39세	71.5	19.8	36.9	48.9	8.2	12.1	18.3	8.5	3.1	33
40~59세	80.1	14.3	26.3	41.9	21.8	12.4	13.6	10.3	3.5	69
60~64세	93.3	6.7	22.2	49.6	28.4	36.7	35.2	21.2	7.0	12
결혼 상태										
기혼	83.5	13.9	29.0	45.1	21.9	16.2	18.8	12.8	3.8	89
미혼	63.0	19.6	29.3	45.1	7.7	11.2	12.7	4.8	4.1	25
근로 여부										
근로자	81.0	11.3	27.2	49.5	22.7	16.0	18.1	7.3	3.2	86
비근로자	72.6	26.8	34.9	31.7	6.8	12.3	15.4	22.2	5.7	28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76.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 가족 경제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표본 수가 적어 불안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나 가구 소득이 높다고 해도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아서 가족 경

제위기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일을 하는 경우일수록 가족 경제위기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는 비율이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바. 정책 욕구

가족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경제 지원이라는 응답이 76.2%로 가장 높고 그다음 일자리 지원이 11.8%, 심리·정서 지원 4.6%, 법률 지원과 의료 지원 각각 3.1%, 2.7%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 위기 발생 당시 가장 필요한 지원을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76.0%는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가족 경제위기 발생 당시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명)

구분	경제 지원	의료 지원	심리·정서 지원	일자리 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법률 지원	기타	계(수)	χ^2
전체	76.2	2.7	4.6	11.8	1.6	3.1	0.0	(343)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3.9	4.1	1.8	15.0	1.9	3.3	0.0	(149)	11.246
300만~500만 원 미만	80.2	2.1	6.9	6.6	1.2	3.0	0.0	(92)	(0.339)
500만 원 이상	76.0	0.0	6.9	11.3	1.3	4.5	0.0	(67)	
연령									
20~39세	79.0	1.0	6.6	5.4	2.8	5.2	0.0	(113)	18.125
40~59세	75.7	2.8	3.8	14.3	.8	2.6	0.0	(192)	(0.053)
60~64세	70.3	7.0	2.6	18.0	2.1	0.0	0.0	(39)	
결혼 상태									
기혼	75.3	2.3	4.9	13.2	1.6	2.7	0.0	(268)	3.391
미혼	79.3	4.1	3.5	7.1	1.6	4.5	0.0	(75)	(0.640)
근로 여부									
근로자	78.1	0.7	4.5	11.5	1.2	4.1	0.0	(265)	20.524***
비근로자	69.5	9.3	5.1	13.0	3.1	0.0	0.0	(78)	(0.001)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0.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일자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결혼 상태가 기혼일 경우 일자리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높

고, 경제 지원은 미혼의 경우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소득, 연령, 결혼 상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근로 여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는데, 비근로자가 근로자보다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6%포인트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 경제위기를 경험한 응답자 중에서 가족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경제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82%로 대다수이고, 그다음이 일자리 지원으로 9.5%의 분포를 보이며,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가족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본 수가 적어 불안정한 결

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부분 경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로는 가구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자리 지원을 필요로 하며 그 이상이 되는 경우는 법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 및 근로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인 경우 경제 지원 이외에도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고, 근로 여부에서는 비근로자의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11. 가구 및 응답자 특성별 현재 가족 경제위기 해결에 가장 필요한 지원(1순위)

(단위: %, 명)

구분	경제 지원	의료 지원	심리·정서 지원	일자리 지원	돌봄서비스 지원	법률 지원	기타	계(수)	χ^2
전체	82.0	1.4	1.6	9.5	1.5	3.9	0.0	(110)	
월평균 가구 소득									
300만 원 미만	79.0	2.4	2.9	12.0	1.3	2.4	0.0	(63)	9.644
300만~500만 원 미만	83.0	0.0	0.0	12.3	0.0	4.7	0.0	(24)	(0.472)
500만 원 이상	81.2	0.0	0.0	0.0	6.1	12.7	0.0	(13)	
연령									
20~39세	78.3	4.7	3.0	3.4	0.0	10.6	0.0	(33)	18.814*
40~59세	85.8	0.0	1.2	10.4	1.2	1.3	0.0	(65)	(0.043)
60~64세	71.7	0.0	0.0	21.6	6.7	0.0	0.0	(12)	
결혼 상태									
기혼	81.3	1.8	0.9	10.0	1.9	4.1	0.0	(86)	2.195
미혼	84.6	0.0	4.1	7.9	0.0	3.4	0.0	(25)	(0.822)
근로 여부									
근로자	87.3	1.9	1.2	6.3	0.0	3.4	0.0	(82)	12.390*
비근로자	66.5	0.0	2.9	19.2	5.8	5.6	0.0	(28)	(0.030)

자료: 김유경, 이여봉,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2016).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 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81.

3. 나가며

가족 경제위기 관련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 경제위기 발생에서 고연령층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위기에 훨씬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경제위기를 경험하는 기간은 가족 자원과 관련이 높는데, 다른 집단에 비해 저소득층의 가족위기 경험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 위기 경험에 대응하는 가족 자원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족 경제위기 경험 후에는 경제생활이 어려워졌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가족관계 및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함께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경제위기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는 부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결속하고 화합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끼게 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¹⁴⁾ 가족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는 가족이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계 부채 증가, 교육비 증가, 실직 등과 같은 가족 경제위기 경험 확대와 가족의 소규모화 및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가족 돌봄 자원 고갈, 가족 갈등 심화와 해체에 따른 어려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족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극복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가 아닌 개인과 가

족에게 상당 부분 맡겨져 있다. 최근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자원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본고의 조사 결과에서 가족 위기에 빠졌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거나 외부 지원이 없어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큰 것으로 볼 때,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가족 위기 예방과 사후적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은 다음과 같다. 단, 경제적 측면의 지원 이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족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보와 심리 지원을 우선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수습한 이후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첫째, 위기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자원 확충의 통로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현재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주민의 가족생활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와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일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센터에서는 패밀리 웹진을 통해 가족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전달 매체를 활용하여 가족 위기 관련 정책에 대한 정보 전달 창구 역할을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14) 백진아. (2001).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와 가족주의. **사회발전연구**, 7, 27-50; 정진성(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연구학**, 24(1), 91-121.

가족 지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가족위기 대응 정책의 체감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실업, 부채, 하우스푸어 등의 가족 경제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노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계 소득이 늘어날 때 가족 경제위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계 부채 축소 과정에서 저소득계층과 저신용계층 등의 서민 가계의 어려움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지원 중에 ‘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있다.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출소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하기가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단, 이 사업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은 이들의 고용 유지율이 낮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용지원금이 끊기면 고용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⁵⁾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일자리는 시간제 등의 단기 고용 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은 부모의 노후 준비 외에도 청년층의 생애주기 이행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고용촉진지원금, 긴급복지생계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재정 부담 완화 측면에서 이들이 스스로 소득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이 노동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독거노인 및 새싹가족처럼 노동 능력이 없는 가족에게 동일하게 접근할 수는 없다. 전자의 경우엔 취업훈련과 취업 연결을 통해 궁극적으로 빈곤을 탈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입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을 예로 들자면, 이는 저소득층의 근로 활동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유도하기 위해 조세 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로서, 노동 능력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실업급여 제도 역시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동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유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취업훈련은 개인의 기술과 취업 동기 등 개인 체계 차원의 자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다. 취업 연결은 사회 체계 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런데 이처럼 상·하위 차원의 자원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해결 방안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취업훈련과 취업 연계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잦은 취업 단절

15) 뉴시스(2015. 12. 1.). ‘고용촉진지원금’ 직원, 절반은 6개월도 못 다녀.

을 막고 취업 상태를 유지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직무와 기술 간 적합성을 기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도 하다. 따라서 직업훈련과 인력 수급 및 유지 과정에서 관련 기관과 기업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앞에서 서술한 내용을 충실히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원 이후의 애프터케어 또한 중요하다. 지원 이후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케어가 동반되지 않는 일회성 지원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원 이후에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케어가 필요하다. 앞서 첫째 방안에서 언급한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들의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애프터케어를 담당한다면 정책의 효과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